

시민이 행복한 정의로운 서울 구현

주요 업무 보고

2020. 4.

민생사법경찰단

I . 일 반 현 황

1 특별사법경찰 운영개요

- 행정법규 위반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행정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한 제도
- 지명 직무 범위 내의 범죄 행위에 대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직접 수사, 검찰에 송치함으로써 행정의 실효성 강화 및 법질서 확립 제고 기여

법적근거

- 「형사소송법」 제197조(특별사법경찰관리)
 -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써 정함
- 「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」
 - 소속 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(제5조)
 - 소속 관서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지명 직무에 대한 범죄 수사(제6조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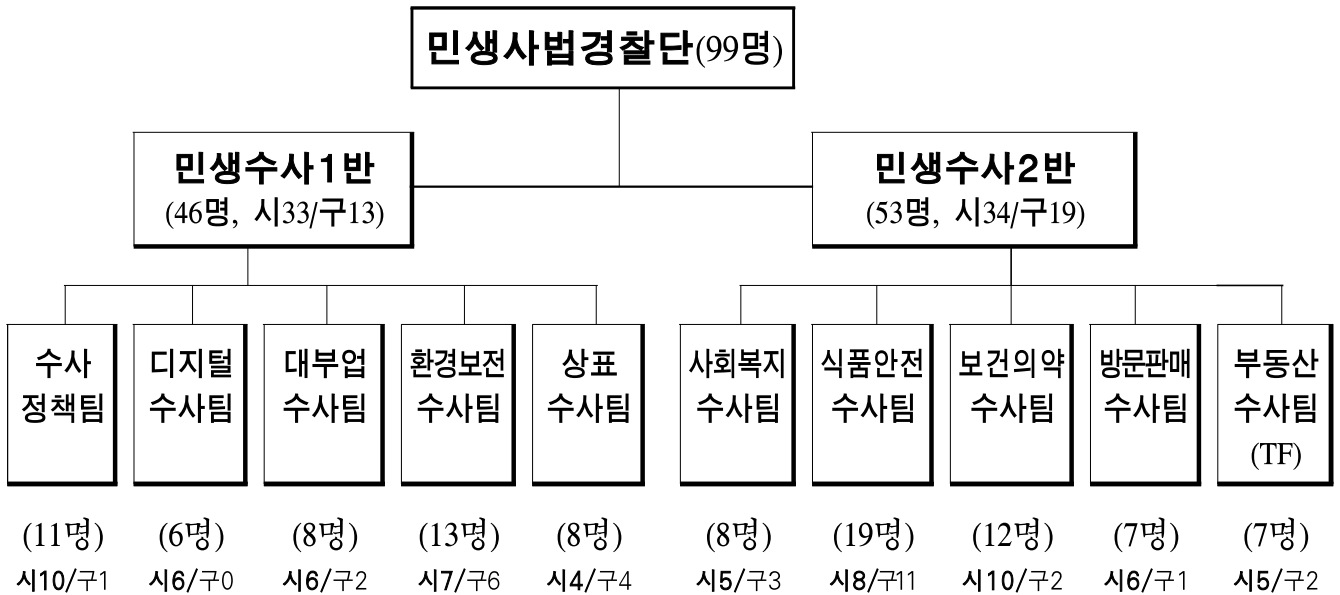
민생사법경찰단 설치연혁 - 16개 분야 지명 운영중

- ▶ '08.01.01 : 지자체 최초 수사전담 조직 창설(1과 2팀, 25개 지원반)
 - ※ 특별사법경찰지원과, 82명(시10, 구72)
- ▶ '08년 : 6개 분야 지명(식품/공중위생/의약/환경/원산지표시('08.2.21), 청소년('08.5.27))
- ▶ '08.03.20 : 법률자문검사 파견(부장검사, 법무부에서 파견)
- ▶ '10년 : 1개 분야 지명(개발제한구역('10.11.22))
- ▶ '12년 : 1개 분야 지명(상표('12.4.18))
- ▶ '15년 : 4개 분야 지명(대부업·다단계판매/석유·자동차관리/화장품/의료기기('15.8.26))
- ▶ '15.11.12 : '민생사법경찰단' 신설(행정국 내 1단·2반·8팀)
- ▶ '16.02.04 : '민생사법경찰단' '국' 조직 승격(행정1부시장 직속, 1단·2반·8팀)
- ▶ '18년 : 4개 분야 지명(의료 및 정신건강시설/사회복지시설/시설물안전/부동산('18.1.18))
- ▶ '18.01.18 : 부동산수사팀(TF) 신설(1단·2반·8팀·1TF)
- ▶ '20.01.10 : 디지털수사팀 신설(1단·2반·9팀·1TF)

2

민생사법경찰단 현황 ('20.4월 현재)

□ 조직 : 1단 2반 9팀/1TF



※ 디지털수사팀 신설 : '20.1.10.(字)

□ 인력 : 99명 (시 67명, 자치구 32명)

< 시 >

(단위 : 명)

구분	계	행정 직 군						기술 직 군				임기제
		소계	3급	4급	5급	6급	7급 이하	소계	5급	6급	7급 이하	6급
정원	68	37	1	2	7	14	13	30	8	17	5	1
현원	67	36	1	2	6	16	11	30	7	14	9	1
과부족	△1	△1	-	-	△1	+2	△2	0	△1	△3	+4	-

< 자치구 >

(단위 : 명)

구분	계	행정 직 군				기술 직 군				비고
		소계	6급	7급	8급	소계	6급	7급	8급	
현원	32	29	13	11	5	3	0	3	0	

□ 2020년 예산 : 1,555백만원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'20년 예산	'19년 예산	'19 예산 대비 증감		'20 예산집행 현황 (20.3.31기준)		
			증감액	증감률(%)	예산액	집행액	집행률(%)
합 계	1,555	1,548	7	0.5	1,555	553	35.6
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 강화	62	64	△2	△3.1	62	16	25.8
사무 관리 비	38	40	△2	△5	38	13	34.0
국 외 업 무 여 비	15	15	-	-	15	-	-
시 책 추 진 업 무 추 진 비	9	9	-	-	9	3	27.9
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 지원	1,165	1,278	△113	△8.8	1,165	347	29.8
기 간 제 근 로 자 등 보 수	7	7	-	-	7	2	23.4
사 무 관 리 비	445	474	△29	△6.1	445	214	48.0
공 공 운 영 비	78	77	1	1.3	78	11	13.8
국 내 여 비	342	378	△36	△9.5	342	37	10.9
시 책 추 진 업 무 추 진 비	21	21	-	-	21	7	31.7
특 정 업 무 경 비	252	276	△24	△8.7	252	75	30.0
재 료 비	15	15	-	-	15	1	9.8
배 상 금 등	1	2	△1	△50	1	-	-
자 산 및 물 품 취 득 비	4	28	△24	△85.7	4	-	-
특별사법경찰 수사전산 시스템 구축 및 운영	188	69	119	172.5	188	175	93.1
사 무 관 리 비	4	-	4	100	4	-	-
공 공 운 영 비	108	36	72	200	108	94	87.4
전 산 개 발 비	9	-	9	100	9	9	100.0
자 산 및 물 품 취 득 비	67	33	34	103	67	57	84.8
기 본 경 비	140	137	3	2.2	140	15	10.7
사 무 관 리 비	116	113	3	2.7	116	12	10.1
국 내 여 비	9	9	-	-	9	-	2.6
기 관 운 영 업 무 추 진 비	6	6	-	-	6	1	25.0
부 서 운 영 업 무 추 진 비	9	9	-	-	9	2	25.8

□ 수사반별 업무분야

반 명	팀 명	담 당 업 무
민생수사 1 반	수 사 정 책 팀	▶ 인사, 조직, 예산, 직무교육, 송치 등 특사경 업무총괄 - 단속·수사 종합계획 수립, 홍보, 제도개선, 사건송치 등
	디 지 털 수 사 팀	▶ 디지털수사 지원 및 각종 수사정보시스템 운영 - 디지털포렌식 수사지원, 수사정보포털시스템 등 운영
	대 부 업 수 사 팀	▶ 불법 대부업 분야 - 불법 대부업 분야 기획·인지 수사 등
	환 경 보 전 수 사 팀	▶ 환경 분야 - 대기·수질·폐기물 등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행위 수사, 가짜 석유제품 불법유통 수사 등 ▶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분야
	상 표 수 사 팀	▶ 상표권 침해 행위 수사 - 상표·상호 도용,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수사 등
민생수사 2 반	사 회 복 지 수 사 팀	▶ 사회복지시설 분야, 청소년보호분야 - 사회복지사업법 위반행위(보조금 목적외 사용 등) 수사 - 청소년 유해 매체물 배포, 유해 약물 판매 및 출입·고용금지 위반 등
	식 품 안 전 수 사 팀	▶ 식품·원산지표시 분야 - 식품 제조·가공·유통과정 위반, 농수축산물 원산지 위반 - 수입식품안전관리 및 식품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위반행위 수사
	보 건 의 약 수 사 팀	▶ 공중위생·의약·화장품·의료기기·의료 및 정신건강시설 분야 - 공중위생업소 불법행위, 불법의약품·화장품·의료기기 제조·판매사범 - 무면허 의료행위, 의료기관불법개설행위, 정신건강시설 이용자 보호 관련 수사 등
	방 문 판 매 수 사 팀	▶ 불법 방문·다단계판매 및 할부거래 분야 - 불법 다단계판매, 선불식 할부거래업(상조)
	부 동 산 수 사 팀 (T F)	▶ 부동산 불법행위 분야 - 주택법, 공인중개사법,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 수사 등

3

수사실적('20.3월말 기준): 151건/ 170명 입건 (단위:건/명)

('20년 1~3월 기준)

구분 ('20년 1~3월)	입 건		수 사 중		검찰지휘		검찰송치		*기타	
	건	명	건	명	건	명	건	명	건	명
합 계	151	170	101	118	24	25	26	27	-	-
대 부 업	3	4	-	-	3	4	-	-	-	-
환 경	13	19	12	18	-	-	1	1	-	-
석유및자동차	9	11	7	9	1	1	1	1	-	-
개발제한구역	5	5	4	4	1	1	-	-	-	-
상 표	5	5	4	4	1	1	-	-	-	-
부 동 산	7	10	3	6	3	3	1	1	-	-
청 소 년 보 호	-	-	-	-	-	-	-	-	-	-
사 회 복 지	1	2	1	2	-	-	-	-	-	-
식 품 위 생	61	64	37	40	4	4	20	20	-	-
원 산 지 표 시	2	2	-	-	2	2	-	-	-	-
의 약	11	12	10	11	1	1	-	-	-	-
의 료 시 설	1	1	1	1	-	-	-	-	-	-
공 중 위 생	32	33	21	21	8	8	3	4	-	-
화 장 품	-	-	-	-	-	-	-	-	-	-
의 료 기 기	-	-	-	-	-	-	-	-	-	-
방문및다단계	1	2	1	2	-	-	-	-	-	-

*기타(타관이송, 고발취하, 반송 등)

4

세부 직무 범위 : 16개 분야/ 71개 법률

지 명 분 야	직 무 내 용	직무관련 법률
식 품 위 생	▶부정식품 추방으로 시민체감 먹거리 안전 확보 (식품생산→제조→유통 등 위해여부, 위생관리 등) ▶수입식품안전관리 및 식품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위반행위 수사	○ 식품위생법 ○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○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○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(식품위생 범죄) ○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 ○ 축산물위생관리법 ○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○ 식품·의약품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
원 산 지 표 시	▶식품·농수산물, 공산품 등 먹거리에 대한 불신 해소 (농·수산물·공산품 원산지허위표시, 인삼·양곡 불법판매 등)	○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○ 인삼산업법 ○ 양곡관리법 ○ 대외무역법(원산지표시)
공 중 위 생	▶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위생수준 제고 (공중위생업소 미신고 영업행위 및 위생상태 등)	○ 공중위생관리법
의 약	▶가짜 의약품 등으로부터 시민건강 확보 (무자격자 고용 의약품 판매, 의약품 불법유통 등)	○ 약사법 ○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(약사 범죄)
환 경	▶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맑은 환경 보전 (대기·수질·폐기물 등 환경보전위반행위 등)	○ 대기환경보전법, 물환경보전법 등 31개 법률 ○ 석면안전관리법 등 7개 법률
청 소 년	▶청소년의 건전한 정서함양 및 탈선예방 (청소년유해매체물·약물, 유해업소출입·고용위반 등)	○ 청소년 보호법
개 발 제 한 구 역	▶그린벨트 내 불법행위 차단으로 건전생활공간 조성 (무허가 건축, 공작물 설치행위 등)	○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
상 표 권 침 해	▶위조상품 제조·판매 근절로 상품신뢰도 제고 (상표·상호 도용 등 부정경쟁 및 상표권 침해 등)	○ 상표법 ○ 대외무역법 ○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
대 부 업 및 판 매	▶대부업·방문판매 등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사업 육성	○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○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○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
화 장 품	▶안전한 화장품 보급을 통한 국민보건 향상 (가짜 무등록 제품 제조 및 판매행위 등)	○ 화장품법
의 료 기 기	▶안전한 의료기기 보급을 통한 국민보건 향상 (가짜 무등록 제품 제조 및 판매행위 등)	○ 의료기기법
석 유 및 자 동 차	▶시민의 안전과 환경오염을 위협하는 불법행위 근절 (가짜석유 유통, 무등록 석유판매, 무등록 불법정비 등)	○ 석유사업법, 자동차관리법 등 3개 법률
의 료 및 정 신 건 강 시 설	▶의료관련 개인정보 보호 ▶정신건강시설 이용자 보호	○ 의료법 ○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
사 회 복 지	▶사회복지법인, 사회복지시설 및 보조금 관련 수사	○ 사회복지사업법
시 설 물 안 전	▶시설물의 안전점검 등을 통한 재해와 재난 예방 (3종 시설물 중 민간관리주체 소관 시설물 긴급안전 점검을 거부행위 등 ex.150세대이하 공동주택)	○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
부 동 산	▶부동산 불법행위 수사를 통한 주거안정 도모 (분양권 불법전매, 청약통장 불법거래, 뺏다방 단속 등)	○ 주택법 ○ 공인중개사법 ○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

II. 진단·분석 및 성과 목표

1. 현 상황에 대한 진단·분석

2. 2020년 성과 목표

1. 현 상황에 대한 진단·분석

□ 그간의 성과

▶ 수사실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직무분야(16분야/71법률) 수사 ➡ 1,094건 형사입건(19년) ※구속 12명 · 부동산·사회복지 등 신규분야 및 다단계·대부 등 민생경제분야 수사집중
▶ 역량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수사전문관(現18→25명까지) 확대, 전문직렬(지적, 사회복지, 전산) 정원 증원 · 전문수사인력 체계적 양성 (※디지털포렌식, 자금추적·분석교육 등 실시)
▶ 기반구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디지털포렌식 센터 구축 및 수사 지원(19년 : 총 50회 169개 매체) · 수사정보포털시스템 구축운영 및 범죄정보 수집분석시스템 개발운영
▶ 협치·공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국토교통부, 보건복지부, 식약처 및 한국대부금융협회 등 유관기관 공조 · 시·자치구 및 광역시·도 특사경 협업 (※전국 특사경 워크숍: 19.12.)
▶ 홍보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시 홈페이지, 스마트폰 앱 및 포상금 제도 활용 ➡ 범죄신고제도 활성화 · 주요 수사결과 발표(※19년 27건 보도자료 배포) ➡ 유사범죄 피해 예방



(부동산) 집값 상승 부추긴 청약통장 브로커 등 22명 입건(3명 구속)



(다단계) 핀테크 포방 케이업체 대표 등 4명 형사입건(주범1명 구속)



(식품) 유해성분 함유 베트남산 다이어트차 판매 15명 형사입건



(상표) 국산 둔갑한 중국산 액세서리 폭리 취한 업자 4명 입건(1명 구속)

□ 한계 및 보완사항

인권역량	<p>수사와 관련한 국민의 기대치에 부응한 인권대책 강화 필요</p> <p>⇒ 제도정비 및 인식개선을 통한 인권역량 강화</p> <p>(※공통 인권 매뉴얼 제작 활용, 수사관 인권교육 강화)</p>
수사역량	<p>사전적 정보 분석과 예방적 대응 및 정책피드백 미흡</p> <p>⇒ 수사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제도개선 등 예방적 기능 수행</p> <p>(※빅데이터 기반의 첨단기술 활용, 디지털수사 활성화)</p>

2. 2020년 성과 목표

비전

시민이 행복한 정의로운 서울 구현

목표

민생범죄 척결 및 사전예방 ⇒ 민생침해 Zero화

전략 1

시정 역점사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수사력 강화

- 부동산+청년+돌봄 등 시정 역점사업에 수사력 집중 지원
- 수사직무별 市 유관부서 협업 강화로 정책완성도 제고
- 수사결과의 환류기능 강화로 제도개선 및 범죄피해 예방 강화

전략 2

인권에 기반한 민생안정을 위한 수사 활성화

- 인권보호 신규 제도 신설·운영 : 인권정책자문단, 영장신청사전심사제
- 수사관 인권의식 함양 : 인권수사매뉴얼 제작, 수사관 인권교육
- 인권친화 수사환경 조성 : 영상녹화 고지, 메모권 보장 등

전략 3

디지털 기반 구축을 통한 과학수사 활성화

- 디지털수사기반 : (검·경)시스템, 디지털포렌식센터, 수사정보포털시스템
- 빅데이터 기반 첨단기술 활용 : 온라인 범죄정보 수집 및 분석
- 사전 범죄예방을 위한 시기별·타깃별 홍보 : 민생침해 사전예보제

III. 2020년 핵심사업

1. **시정 역점분야에 수사력 집중 지원**
2. **인권에 기반한 민생안정을 위한 수사 활성화**
3. **디지털 기반 구축을 통한 과학수사 활성화**
4. **(현안) 코로나19 대응 수사 및 단속 성과**

1

시정 역점분야에 수사력 집중 지원

- ◆ 수사직무별 市 유관부서 지원 및 협업 강화 ⇨ 정책 완성도 제고
 - ▶ 경제·민생 살리는 협업수사로 시민의 '공정한 출발선' 을 만드는데 역할

□ 부동산+청년+돌봄 등 시정 역점사업에 수사력 집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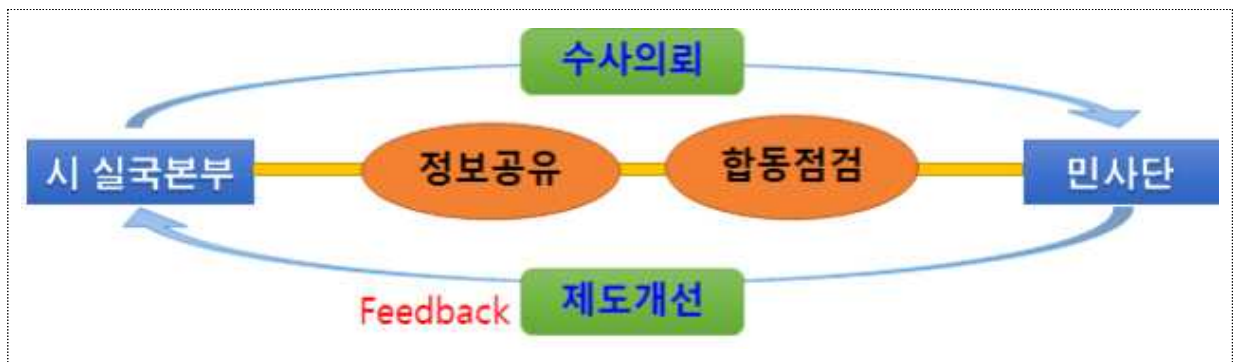
- 유관부서와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市의 주요 정책을 지원

- <기존> 행정지도·단속 ⇔ 수사 ⇨ <개선> 협업 + 상생 + 환류

구 분	2020년 시정 역점사업 공조수사(안)	협업부서
① 부동산	- 집값담합* 및 청약통장 불법거래 수사 *공인중개사법 개정(20.2.21.시행)으로 수사 가능	▶ 도시계획국 ▶ 주택건축본부
② 청년	- 취업준비생 대상 불법 다단계업체 수사 - 대학생 등 온라인 대부업체 수사	▶ 노동민생정책관 ▶ 경제정책실
③ 돌봄	- 어린이집 등 보조금 부정수급 수사	▶ 여성가족정책실 ▶ 복지정책실
④ 환경	- 『미세먼지 계절관리제』 시행 합동 단속 - 감염방지를 위한 폐기물 부적정 처리 수사	▶ 기후환경본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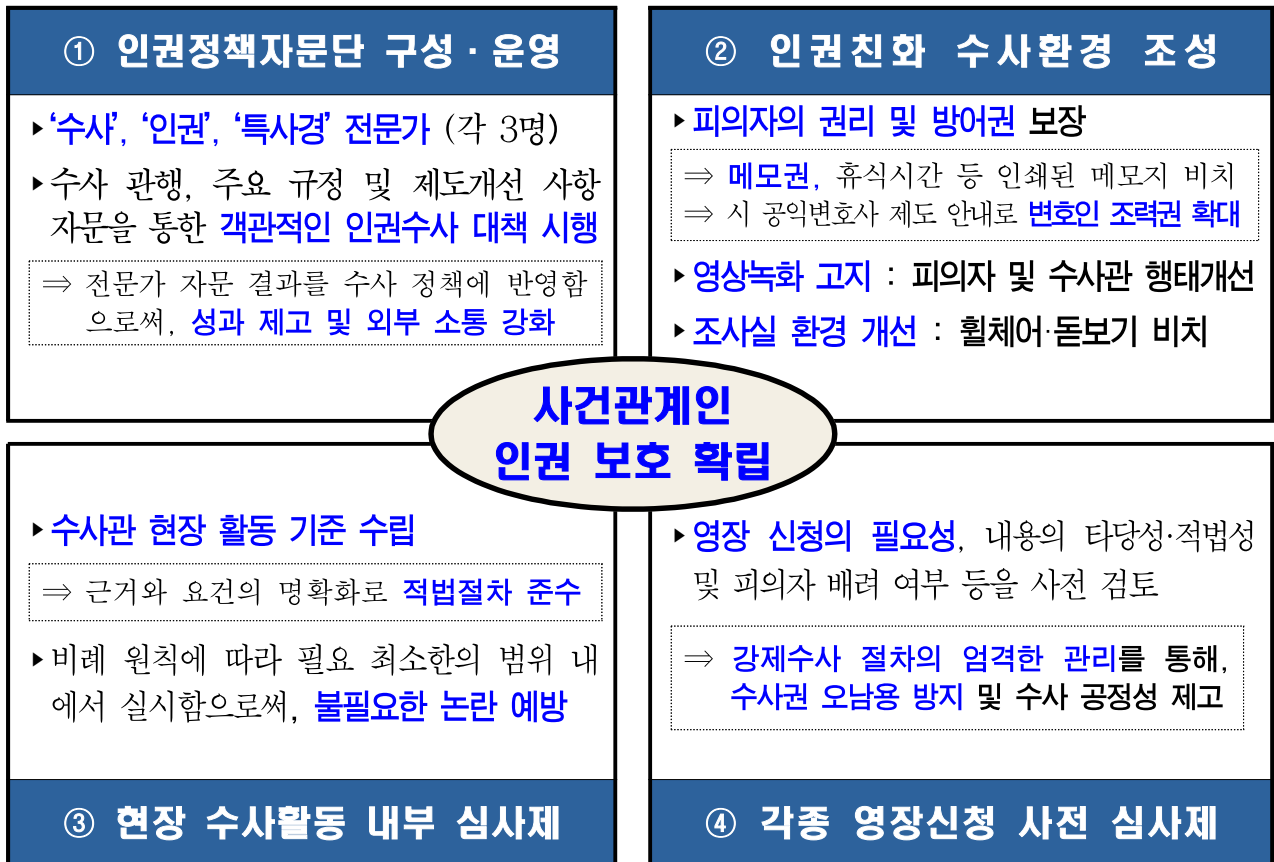
□ 민사단 수사권 활용, 市 15개 실국본부(39개 부서)와의 협업 수행

- 직무분야별 협업으로 정책의 효과성 제고, 수사결과 정책 환류기능 강화



- ◆ 인권보호 제도기반 구축 및 인권의식 함양 ⇨ 사건관계인 인권보호
 ▶ 100건의 실적보다 **‘1명의 인권’** 을 더 소중히 여기는 인권보호기반 확충

□ **인권보호 제도기반 구축·강화 :** **인권 중심 특별사법경찰상 정립**



□ **수사관 인권의식 함양 :** **수사 전 과정에 ‘인권 최우선 가치화’**

- 매뉴얼에 따른 수사 및 정기적인 인권교육으로 수사관 인권역량 강화
 - 구체적 사례 중심의 **지방자치단체 최초 인권수사 매뉴얼** 제작·활용
 - **국가인권위원회와 협업을 통한, 수사관 인권교육** 시행 : 반기 1회
- 수사관 **원스트라이크 아웃제** 시행 : 인권침해 발생시 즉시 수사에서 배제
- 스트레스 상담 등 **수사관 힐링 프로그램** 운영 : 반기 1회(市 쉽표 연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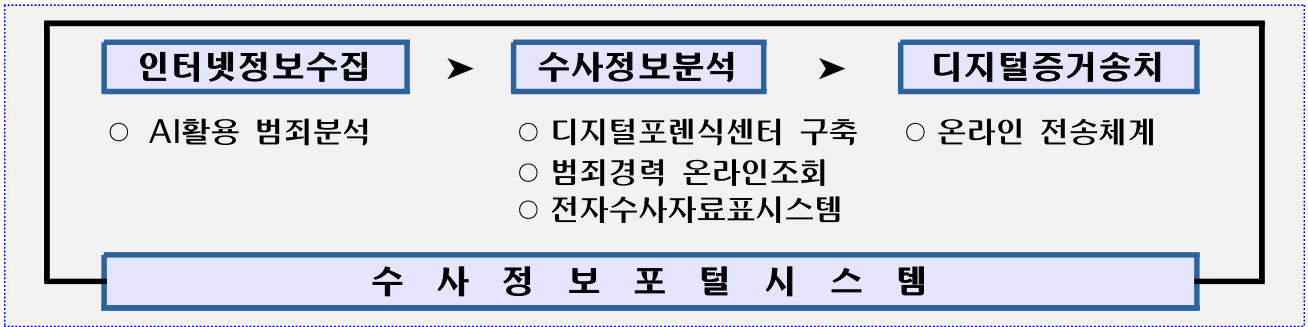
3

디지털 기반 구축을 통한 과학수사 활성화

- ◇ 既 도입 시행 중인 디지털 기반 구축 및 수사시스템 활성화 추진
 - ▶ 제보위주의 적발수사에서 '데이터 분석을 통한 기획·예방수사 강화'

□ 디지털 수사시스템 구축 현황

※ 디지털수사팀 신설('20.1.10.)



○ 지방자치단체 최초 '디지털포렌식*센터' 구축·운영

- 추진실적 : 총 127회, 471개 매체분석('17.8~'19.12)

* 스마트폰, PC 등 디지털기기에 기록, 삭제된 정보를 수집·추출·복구 분석으로 범죄의 단서 및 증거를 찾아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과학수사기법

○ 수사업무 전산관리를 위한 '수사정보포털시스템' 구축·운영('18.12월~)

- (기존) 각종 수사관련 자료 수기 관리 ⇨ (구축) 사건, 통계 등 전산화

□ 첨단기술을 활용한 디지털수사 활성화

○ 『온라인 범죄정보 수집·분석시스템』 기능 강화 ⇒ 범죄예측 및 집중수사



○ 데이터 분석 솔루션 도입('20) ⇨ 금융기관별 계좌 통신사별 통신자료 통합·분석

□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사전범죄예방 강화 **민생침해사전에보제**

○ 시기별·업종별 시의성 있는 예방적 기획수사 확대 ⇒ 시민체감도 향상

- 빅데이터(수사실적, 민원사항 등) 분석을 통한 주요 수사대상 범죄 선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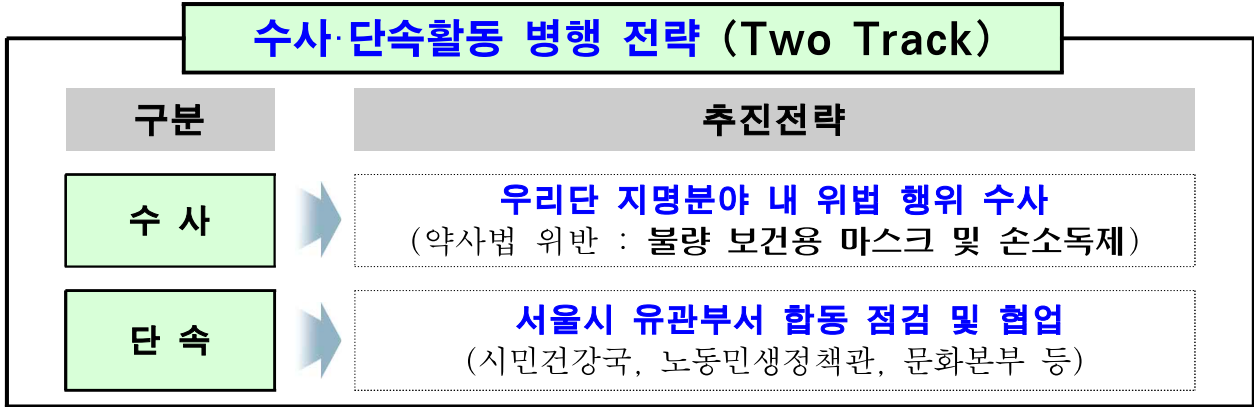
○ 주요 수사대상 범죄를 수사개시 前 보도자료 배포 ⇒ 사전범죄예방 중점

※ (7월:여름휴가철)계곡주변 개발제한구역 훼손, (8월:가을졸업시즌) 사회초년생 대상 불법다단계

4

(현안) 코로나19 대응 수사 및 단속 성과

추진방향



추진 성과

1 불량 보건용마스크 및 매점매석 행위 등 수사 ('20.2월)

① 제조원 등 표시 없이 벌크(묶음) 포장된 불량 마스크 2만장 압수 (2.13)

- 제조원 표시 및 개별 포장으로 밀봉되어야 함에도 10개 단위로 비닐봉투에 묶어 종이박스 등에 임의 보관 ※ 약사법 위반으로 우리단 직접 수사 후 검찰송치 예정
⇒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(약사법 제65조 및 제66조)

② 기재부 매점매석 고시 위반 보건용 마스크 온라인 판매업체 단속 (2.14)

- '19년 월 평균 600개를 판매하던 업체임에도, '20.2.14 현재 8100개(1억8천만원 상당) 재고 보유로 同 고시 위반 ※ 식약처 고발 조치 완료('20.2.18)
⇒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(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)

③ 제조번호·사용기한 고의 삭제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유통업체 적발 (2.14)

- 사용기한이 경과하여 폐기 처분해야 할 제품을 판매를 목적으로 고의로 위조한 2개 업체 적발 ※ 약사법 위반으로 우리단 직접 수사 후 검찰송치 예정
⇒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(약사법 제61조 및 제66조)

④ 기타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허위·과대광고 온라인 쇼핑몰 103건 적발

- 판매업체가 소재한 서울시를 포함한 12개 광역 시도에 적발내용을 통보하여 시정조치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 완료('20.2.24~2.25)

※ 성과홍보('20.2.19) : KBS, MBC 등 12개 방송, 문화일보 등 3개 매체 지면, 인터넷 뉴스 43건

② 코로나19 방역소독약품 사용실태 점검 ('20.3월)

□ 점검대상 : 서울시 소독업소 132개 업체

- 전체 업체수 총 1,032업체 중 표본점검(25개 자치구, 주식회사 등 기준)

※ (감염병예방법 제54조1항) 소독약품 유통기한경과제품 사용여부 등

□ 점검결과 및 조치

- 유통기한 경과된 방역소독약품 : 없음
- 방역용 소독제로 미 승인된 「식품기구 등의 살균소독제」 를 보관하고 있는 23개 업체 확인(▶ 주관부서 시민건강국(질병관리과) 통보 및 조치의뢰)

③ 함량미달, 엉터리 손소독제 수사 ('20.2~4월)

□ 수사대상 : 손소독제 18개 검사결과 에탄올 함량미달, 무신고 등 불법제조업체 7개소

□ 수사결과

- 차세정제 공장에서 신고없이, 상표도용 손소독제 8만여병(4억5천만원) 제조판매
- 에탄올 가격상승하자 값싼 소독제를 섞어 48만병(29억원) 제조, 유통
- 코로나19로 수요 급증하자 불량 손소독제(에탄올 19%) 적발(1,600병)

※ 성과홍보('20.4.9) : KBS, MBC 등 8개 방송, 한겨레 등 5개 매체 지면, 인터넷 뉴스 55건

④ 협업 : ① 현장대응반, ② 합동단속반(방역용품 매점매석, 신천지 등)

① 재난안전대책본부 현장대응반 지원(시민건강국 합동, 1.31~종료시까지)

- 코로나19 확진자 인적 사항, 이동 경로, 진료 기록, 접촉자 등 역학조사 수행
- 보건, 약무, 의료기술, 환경직 등 역학조사에 적합한 수사관 총 23명 지원근무

② 방역용품 매점매석 합동단속반 지원(노동민생정책관 합동, 1.31~종료시까지)

- 보건용 마스크 제조·유통업체 등 점검 등 총 227명 지원

③ 신천지 등 종교단체 회합·예배·포교활동 등 현장점검(문화본부 합동, 2.25~)

- 신천지 및 사랑제일교회 등 집회금지명령이행여부 등 총 125명 지원

④ (기타) 시 유관부서와 합동 점검 및 지원(경제진흥실 등 합동, 3.18~)

- 고위험사업장, 노래방, PC방 등 현장점검 총 26명 지원

IV. 수사분야별 추진계획

1. 부동산 거래질서 위반행위 수사
2.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불법 사금융 수사
3. 서민생계 위협하는 불법 다단계 행위 등 수사
4. 사회복지시설(법인) 복지재원 집행 투명성 제고
5.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을 위한 환경오염 행위수사
6.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으로 시민의 안전생활 제고
7. 부정·불량식품 유통사범 수사로 식품안전성 확보
8. 민생침해 보건범죄 수사로 서울시민 건강보호

1 부동산 거래질서 위반행위 수사

(부동산수사팀)

- ◆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집값담합 행위 및 공인중개사 자격대여 등 불법 중개행위를 중점 수사하여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

□ 주택가격 왜곡하는 집값담합 행위 중점수사

-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세 조작하는 집값담합 행위 우려

- 집값담합 신고 185건 중 77건이 서울 (한국감정원, '18.10.~'19.10. 기준)
- 부녀회, 입주자단체 등을 중심으로 특정 가격 이하 거래를 제한하는 등 부동산 시장 왜곡 심각



- 국토교통부·한국감정원 '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'와 협업체계 구축

- 신고센터 신고접수·신고사항 확인 ⇨ 부동산수사팀 집값담합 행위 즉시 수사
- 단체 채팅방(sns)·인터넷 카페에서의 집값담합 행위 상시 모니터링

※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MOU 체결 (2020.2.21.)

-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 방안 마련 및 보유 정보 교류
- 국토교통부(부동산불법행위대응반)-서울시(민생사법경찰단)-경기도(공정특별사법경찰단)

□ 사회초년생의 피해예방을 위한 불법 부동산 중개 수사강화

- 부동산 계약에 미숙한 대학생 등 사회 초년생의 불법 중개 피해 속출
 - 공인중개사 자격대여, 무자격자의 중개,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 위반행위 다양
- 불법 중개 수사 후 건전한 중개질서 확립 및 피해예방을 위한 적극 홍보
 - 포털사이트 또는 대학 자유게시판, SNS 등에서 부동산 중개 피해사례 확보
 - 수사결과, 피해사례, 부동산 중개 거래 시 주의사항 등 발표 → 피해 사전예방

□ 청약과열 아파트 단지 대상 공급질서 교란행위 수사

- 국토교통부(주택기금과)·한국감정원(청약시장관리부)과 합동점검 실시
 - 청약과열 단지 선별하여 청약통장 불법 거래, 부정청약 등 점검
- 청약통장 불법 거래 및 분양권 불법 전매에 대한 수사 계속
 -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세력의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 엄단

▶ 2020년 수사실적 : 총 7건, 10명 형사입건(3. 31.기준)

2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불법 사금융 수사

(대부업수사팀)

- ◆ 서민과 취약계층 상대로 법정 이자율(연 24%) 초과하는 고금리 수취, 무등록 불법영업, 불법광고행위 등 근절

□ 미등록·등록 대부업체 불법행위 지속 수사

- 금융기관 대출심사 강화 등으로 저신용자 불법 사금융 유입 확대 우려
 - 등록대부업체 신규대출 규모 20% 감소('17년 7조326억원 ⇒ '18년 5조 6,378억원)
 - 불법사금융 이용 규모 4% 증가('17년 6조 8,271억원 ⇒ '18년 7조 1,221억원)
- 등록 대부업체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 강화
 - (자체) 서울시 등록 대부업체 전수조사 등을 통한 기획수사(3~4분기)
 - (합동) 시 공정경제담당관·자치구 합동점검 수사자료 확보(연2회)

□ 상가밀집지역 및 온라인 불법대출 수사 강화

- 불법전단지 배포 및 온라인 불법대출 확산으로 시민불편 및 피해 발생
 - 불법광고 전단지 전화번호이용중지 건수 6% 증가('17년 13,610건 ⇒ '18년 14,249건)
 - 온라인 불법 대출광고 적발건수 8배 증가('17년 1,328건 ⇒ '18년 11,000건)
- 불법전단지 집중 배포지역 및 온라인 정보활동 및 모니터링 강화(3~4분기)
 - 대부업 홍보용 광고전단지 배포지역 현장 오프라인 집중 감시
 - ※ 시장·상점가, 지하철역·대학가 등 영세업자·청년층 대상 불법전단지 배포
 - 대부중개사이트, 유튜브·개인 SNS 등을 통한 온라인 불법광고 모니터링

□ 유관기관과의 수사정보 공유 등 긴밀한 수사 협조체계 구축

- 총리실(금융위) 불법사금융 척결대응단T/F 구성·운영 참여('20.5월~)
- (시)공정경제담당관 + 한국대부업금융협회와 정보공유 간담회(분기1회)
 - 공정경제담당관 : 대부업체 지도·감독, 불법 대부업 피해상담센터 운영 등
 - 한국대부업금융협회 : 일간지 광고모니터링, 소비자보호센터 운영
- 대부업체 불법 영업행위, 미등록 대부업체 피해사례 등 정보공유(연중)

▶ 2020년 수사실적 : 총 3건, 4명 형사입건 (3. 31.기준)

3 서민생계 위협하는 불법 다단계 행위 등 수사 (방문판매수사팀)

- ◆ 사회취약계층 현혹하는 민생침해 다단계 판매조직 집중수사
- ◆ 다단계 판매방식으로 영업하는 위법 상조업체 수사강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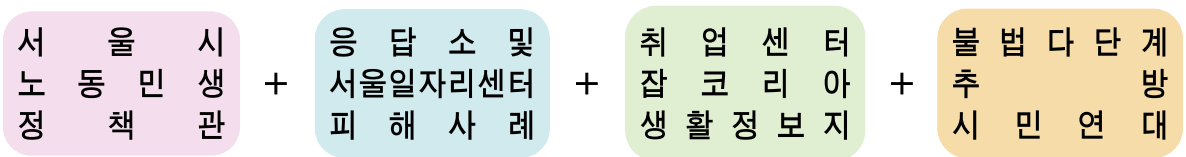
□ 사행성과 하방확장성을 이용, 서민 올리는 불법 다단계 집중수사

- 다단계 조직 이용, 금전거래 행위 등 피해 심각
 - 최근 전통적인 다단계 영업(재화 판매)에서 수익성이 큰 금전거래로 불법양상 변화
 - 금전거래 등 고수익 미끼로 투자금 수신, 피해증가('18년 3건/8명 ⇒ '19년 10건/24명)
- 거버넌스 활성화를 통한 범죄예방 등 협업시스템 구축
 - 피해사례와 수사성과 등 협업기관과의 상호정보 공유, 협의 정례화(분기 1회)

서울시	공정거래위원회	공제조합	한국소비자원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다단계업체 등록 · 신고접수, 상담, 분쟁 조정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소비자보호사책 수립·시행 · 피해사례 등 교육 및 홍보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소비자 피해 보상 및 예방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소비자 민원상담 및 피해 구제 등

□ 취업난 악용 구직자 대상 불법 다단계업체 수사강화

- 청년·중장년층 대상으로 불법 다단계영업 성행, 사회문제 야기
 - 취업알선, 설명회 등 거짓 명목으로 유인, 구직자 대상 불법행위
- 맞춤형 대 시민 홍보 강화 및 보도자료 등 수시 제공
 - 수사결과, 범죄유형 분석 및 진단을 통해 유사범죄 방지 방안 확보
 - 연령·업종별 일자리 민·관 창구와 협력, 구직시 다단계 피해방지 유의사항 등 안내



□ 상조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위법행위 수사

- 피해 확산이 큰 다단계 판매방식 영업 성행
 - 상조업체 수익개선 목적으로 다단계방식 회원모집 증가 추세
- 수사결과, 피해 및 원인 등을 유관기관(공정위, 공제조합 등)과 공유, 피해확산 차단
 - 선수금 미보전 및 해약환급금 미지급, 미등록 행위 등 지속 수사

▶ 2020년 수사실적 : (다단계) 총 2건, 4명 검찰송치 / (할부거래) 총 1건, 2명 수사중

4 사회복지시설(법인) 복지재원 집행 투명성 제고 (사회복지수사팀)

- ◆ 사회복지시설 복지재원의 투명한 집행과 위법성에 대한 중점수사 추진
- ◆ 공공재정의 운영목적과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위한 복지정책의 지원 강화

□ 복지예산 매년 증가 추세로 집행의 투명성 강화 필요

- '20년 복지예산 12조 8,789억원, 시 전체예산의 36.5%, 매년 증가되는 상황
- 96,597억원('18)→ 111,574억원('19)→ 128,789억원('20)
- 사회복지시설(법인) 보조금 및 직·간접 지원으로 높은 공공성과 투명성 요구되나
보조금 부정수급, 보조금 목적외 사용, 횡령 등 보조금은 '눈먼 돈'이라는 인식 팽배
※ '19년 ○○법인(강서구)의 보조금 목적외 사용, 횡령(7억6천 추정) 등 12건 18명 검찰 송치

□ '20년 보조금관련 위법사항 집중수사로 복지재정 신뢰성 제고 추진

- 일반국민 상대적 박탈감 유발하는 보조금 부정수급 등 재정 누수사항 수사 추진
-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등에 대한 위법사항 중점 수사
※ '19.10월 중앙정부 발표 : 보육지원사업 고위험 집중관리사업으로 지정 예정
※ '교사 가짜 등록·식자재 유용' 비리 어린이집 13곳 적발('19.4.4. 한겨레신문)

서울시 복지시설	계	사회복지관	노인복지시설	장애인복지시설	어린이집	노숙인시설	기타
	7,517	98	236	630	5,718	77	758

-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관련 기본재산 무허가 처분 등은 지속 수사 추진

□ 정부·민간단체와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으로 수사정보 수집 강화

- 정부·시·자치구와 소통강화, 자료공유, 합동점검
- 시민단체, 시설 종사자·학부모 모임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색출활동 강화
- 위법사항 검찰송치 및 해당부서 통보 (※ 환수·보조금 지급 제한 등 추가 제재)

▶ 2020년 수사실적 : 총 1건, 2명 형사입건

5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을 위한 환경오염 행위수사 (환경보전수사팀)

- ◆ 시민건강을 해치는 배출오염원 관리로 환경오염 사각지대 수사 강화
- ◆ 대기질 개선을 위해 미세먼지를 많이 발생시키는 사업장 중점 관리

□ 『미세먼지 계절관리제』 시행에 따른 대기배출사업장 집중수사

- 서울시 미세먼지 발생특성, 계절기간(12월~3월)에 연평균대비 최고1.5배 수준
 - 최근 3년간 고농도($50\mu\text{g}/\text{m}^3$) 초과일수의72%가 12~3월에 집중(38일/53일)
-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계절관리제 시행과 병행 대기오염배출시설 관리
 - 자동차도장시설(200개),도금시설(60개),보일러판매점(20개) 불법 행위

□ 감염방지를 위한 폐기물 부적정 처리 수사

- 폐기물 불법처리 등 폐기물 보관·운반·처리 기준 위반행위 단속
 - 무허가 수집·운반, 폐기물 종류별 처리방법 준수 여부 확인
(폐기물 배출업소 및 처리업소 등 230개소)

□ 공공수역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폐수배출행위 수사

- 절삭유, 강력세정제 등 유해물질 사용으로 공공수역 오염행위 차단
 - 절삭유사용 금속제조업, 자동차튜닝업체 불법세차 등 폐수무단배출 단속

□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해치는 불법행위 상시수사

- 개발제한구역을 무단으로 훼손하는 행위는 원상복구시까지 단속
 - 여름철 행락객 대상 계곡을 훼손하여 영업하는 식당 집중 관리
- 석유제품 불법 판매, 사용행위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 단속
 - 가짜석유판매, 주유차량 불법 개조, 정량미달 판매 행위 등
- 아파트, 학교 등 석면제거사업 불법행위 집중 단속

▶ 2020년 수사실적 : 무허가도장, 석유류 불법유통 등 24건, 35명 입건

6 **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으로 시민의 안전생활 제고** (상표수사팀)

- ◆ 서민생활에 피해를 주는 생활 밀착형 상품에 대한 ‘원산지표시위반’ 행위 및 ‘위조상품’ 제조·유통 중점 수사

□ 원산지 표시위반 공산품 집중 수사

- 저가의 외국산 공산품을 수입하여 고가의 국산품으로 둔갑시켜 시민 안전 위협 및 시민을 속이는 “공산품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” 근절 필요
 - 유통질서 정상화 등 정당한 목적이 있을 경우 상시수사(연중) 추진
 - ※ 코로나19 이후 동대문, 명동시장 휴점 업소 다수, 서울시 소상공인 매출 80% 감소, 매일 3천억원 매출 손실 추정(출처 소상공인연합회 3.16.)
 - 겨울용 의류 원산지 표시위반 집중 수사(9~11월)
 - ※ 불법 라벨갈이가 많은 겨울용 의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수사에 수사력 집중
- 공산품 원산지 표시위반 수사 전담반을 구성하여 상시 수사체계 구축
 - 시민(소비자 등) 피해가 크고 범죄규모가 큰 사건 수사 집중
 - 도심제조업 분야 및 대규모 생활용품 원산지 위반 집중수사로 파급효과 제고

□ 시민생활에 위해를 가하는 위조상품 수사

- 관광시장 정상화 목적으로 경찰청·특허청 등 유관기관 합동수사 실시
 - 고발·제보 등에 즉시 대응하고 수사력 함양을 위해 전담수사반 상시 운영
- 의류, 장난감·인형 등에 대한 상표권 도용으로 어린이 건강을 위협하고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조상품 유통 수사(4~6월)
 - 유해성분 포함, 품질저하 등 어린이 관련 위조상품(장난감, 인형, 아동복)

□ 범죄현장 맞춤형 기획수사 강화

- SNS 등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위조상품 수사
 - 위조상품 유통 모니터링, 통신 및 금융영장 확대로 사업자 등 피의자 색출
- 범죄 취약시간대인 야간 현장수사 활동 강화
 - 동대문, 남대문 등 영업시간(21시~09시) 고려하여 야간 수사활동 강화
- 유관기관·단체와 정보 공유로 수사효율성 제고 및 범죄 예방효과 극대화
 - 유관기관·단체 : 관세청, 특허청, 봉제협회, 의류협회 등

▶ 2020년 수사실적 : 상표법위반 총 5건, 5명 형사입건/ 위조상품 803점 압수

- ◆ 시민건강 위협하는 관례적, 대규모 부정·불량식품제조·유통사범 중점 수사
- ◆ 정보분석 활용, 반복적 범죄에 대하여 시기에 맞춰 대시민 주의사항 사전홍보

□ 식품첨가물로 제조한 식품의 용기·기구 등 소독제 수사

- 식품첨가물로 제조한 제품을 살균·소독제로 판매하는 행위 단속
 - 최근 코로나19 살균·소독제 부족으로 식품첨가물로 제조된 기구·용기 소독제를 의약품 성분의 소독제로 유통·판매하는 행위 집중 단속
- 온라인 유통제품에 대한 과대광고 행위 집중 조사
 - 허위·과대 광고하여 바이러스 퇴치용이라면서 소비자를 기만하며 판매하는 행위 확인 시, 식약처 홈페이지를 활용 관련제품의 품명, 성분 등 즉시 추적

□ 인터넷을 통한 유해식품 제조·유통사범 수사

- 해외 직구 등 인터넷을 통한 국적불명의 식품 판매 증가로 안전성 위협
 - 위해성분 함유된 다이어트, 정력 제품 유통될 개연성이 높음 → 유해식품 선제적 차단
- 의심업소 제품 검사결과에 따라 수사 착수 및 관세청 등과 공조수사

□ 부정불량식품 제조·유통사범, 무한리필 음식점 등 부정 식재료 유통수사

- 유통기한 경과, 성분불상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제조·유통사범 수사
 -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과 맞물려 저가의 원재료를 사용하고 유통기한 경과 및 성분을 알 수 없는 원료를 사용·제조하여 식품접객업소, 무한리필 음식점, 배달앱 전문 음식점 등에 유통하므로 식품의 안전성 염려 해소
- 무한리필 음식점, 배달앱 가맹업체의 부정 식재료 유통 수사
 - 원가 절감 목적으로 저질 원료를 섞어 팔거나 축산물의 부위 및 등급을 속여 판매하는 행위 집중

▶ 2020년 수사실적 : 무신고 식품접객업 총 61건, 64명 형사입건

8 **민생침해 보건범죄 수사로 서울시민 건강보호** (보건의약수사팀)

◆ 보건의료, 의약, 공중위생분야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시의적절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수사로 서울 시민의 건강권 확보

□ **시민고객 염려하는 생활적폐 불법의료기관 수사**

- 의료기관 불공정행위 및 의료안전사고로 인한 시민안전 보호 필요
 - 정형·성형외과 등에서의 불법 무면허 대리수술행위(간호사, 의료기사 등)
 - 불법개설의료기관(사무장병원등) 영리추구로 의료 질 저하, 안전사고 위협
- 시 의료정책과, 25개 자치구 협업수사(간담회, 정보공유), 복지부 합동 행정조사
 - 서울시 공익포상금 제도 연계, 공익제보 내부고발 활성화

□ **온라인 3대 불법판매 전문의약품(비만, 성기능, 피부미용) 집중수사**

- 수요 많은 비만치료제 삭센다, 비아그라, 미용주사제 메디톡신 등 불법유통행위
 - 불법유통되는 의약품, 인터넷판매가 70% 차지('15년 2만2천 ⇒ '18년 2만8천건)
- 전문의약품 이력추적, 건보공단, 관세청 등과 수사협의체 구성하여 수사
 - 의약품도매상, 제약사직원, 병원 등에서 불법유통, 해외직구 판매행위

□ **불법 화장품 및 의료기기 제조판매행위, 식약처 공조수사**(17년 MOU체결)

- 불법 탈모센터 수사 (※ 의약품을 혼입하여 천연성분 탈모화장품으로 판매 등)
 - 서울시 소재 54개 탈모센터내 불법행위(무신고미용, 불법의료기기 사용 등)
- 질병치료 효과 등의 소비자 기만, 의료기기 불법 제조판매 등 집중수사
 - 중국산 저가 무허가 미용 의료기기 불법유통판매행위 등(서울세관 공조수사)

□ **공유숙박을 위장한 공공임대주택내 불법 숙박행위 수사**

- 서울주택공사 13개 지역센터와 연락체계 확보, 의심세대 발생시 즉시 수사착수
 - 시 주택정책과, 서울주택공사와 협업구축 (※ 시 공공주택현황: 513개단지 200,531세대)

▶ **코로나19 관련 방역물품 수사**

- 보건용마스크 외 매점매석 등 107건 적발 (검찰송치 3건, 타 기관 고발조치 등 104건)
- 함량미달 손소독제 수사 7개소 적발 (불법 손소독제 56만병, 약 33억원 상당)